



# 보 도 자 료

브리핑(14:00)시부터 보도 가능



작성 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, 자산운용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, 자산운용감독실, 복합금융감독국			
책임자	이명순 과장 (2156-9870)	담당자	황기정 사무관 (2156-9872)	
	안창국 과장 (2156-9890)		송병관 사무관 (2156-9891)	
	민병현 국장 (3145-7580)		김동회 부국장 (3145-7570)	
	장준경 실장 (3145-6700)		김진옥 팀 장 (3145-6702)	
	권오상 국장 (3145-8340)		송평순 팀 장 (3145-8360)	
배포일	2014. 7. 14. (월)	배포 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공 보 실(3145-5789~92)	총 7매

## 제 목 :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

I

### 현 황

☐ 금융투자업 인가·등록단위는 업종 및 상품에 따라 총 48종으로 분류

- \* (투자매매·중개·집합투자·신탁업) 인가 업무단위 42종
- \* (투자자문·일임업) 등록 업무단위 6종

☐ 현행 인가·등록 체계는 업무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업 진입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목적

- 증권사 등 전업 금융투자업자는 특정 영역에 전문화·특화하거나, 업무단위 추가(add-on)를 통해 영업 영역 확장 가능
- 은행 등 겸업 금융투자업자는 필요한 겸영·부수 업무에 한해 금융투자업 영위

####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단위 개황

업종	금융투자상품	유형
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	▶ 증권 / 채무증권, 지분증권, 집합투자증권 등	인가(42종)
	▶ 장내파생 / 주권기초	
	▶ 장외파생 / 주권기초, 주권외기초 등	
집합투자업	▶ 모든펀드 / 증권, 부동산, 특별자산, 혼합자산	등록(6종)
신탁업	▶ 모든신탁재산 / 금전만신탁, 금전제외신탁 등	
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	▶ 증권·파생·부동산·예치금 / 증권·파생·예치금, 부동산·예치금	

☐ 한편, 금융위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산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'금융투자업 인가정책'을 수립·운영해 오고 있음

## II

## 평 가

- ‘기능별 규율’ 원칙에 따른 현행 인가제도는 규제차익을 최소화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
- 다만, 전문화·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 효과는 업종별로 차이
  - 자산운용사의 경우 전문화·특화사의 비중이 높아졌으나,
  - 증권사의 경우 위탁매매 중심의 유사한 영업모델로 경쟁하는 시장 구조 하에서 전문화·특화가 상대적으로 미흡
- 오히려, 과도하게 세분화된 인가 업무단위, 인가 소요기간(통상 7~8개월), 인가 반납시 재취득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저해

- ➔ 과도하게 세분화된 인가단위를 간소화하고 인가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투자업 인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,
-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화·특화 및 사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

## III

## 개선 방안

### 1

### 인가제도 개선

#### 가. 인가등록 업무단위 개편

- ①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업종 진입시에만 인가제 적용
  - 일정 업종에 진입한 이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한 업무단위 추가(add-on)는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(자본시장법 개정)
  - \* 단,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인가제 유지
- ②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, 통합 가능한 인가 업무단위를 통폐합(시행령 개정)
  - \* (투자매매업) 사채인수 업무단위 폐지 → 단위수 △1
  - (집합투자업) 부동산펀드·특별자산펀드 업무단위 통합 → 단위수 △1

## < 인가 업무단위 체계 변경 >

현 행			개 선		
업종	상품	업무단위	업종	상품	업무단위
투자 매매업	증권	5개	투자 매매업	①증권	5개
	증권(인수제외)	7개		②증권(인수제외)	7개
	장내파생상품	2개		③장내파생상품	2개
	장외파생상품	4개		④장외파생상품	4개
투자중개업		11개	⑤투자중개업		11개
집합투자업		5개	⑥집합투자업		4개 <sup>2)</sup>
신탁업	전체	4개	신탁업	⑦전체	4개
	금전신탁			⑧금전신탁	
	금전제외 신탁			⑨금전제외 신탁	
	부동산신탁			⑩부동산신탁	
기타(4개) <sup>1)</sup>		4개	⑪~⑬ 기타(3개)		3개 <sup>2)</sup>
총 계		42개	총 계		40개

i) 각 업종에 최초 진입시 인가 필요  
 ii) 진입후 각 업종내 업무단위 추가시  
 에도 인가 필요  
**▶ 인가필요 업무단위는 42개**

i) 각 업종(①~⑬)에 최초 진입시 인가 필요  
 ii) 진입후 각 업종내 업무단위 추가시  
 등록만으로 가능  
**▶ 인가필요 업무단위가 13개로 축소**

- 1) 독립적 인가단위(ATS투자매매업·중개업, 장외채권중개, 사채인수 매매업)는 편의상 기타로 분류  
 2) 인가 업무단위 통폐합(△2) : 사채인수 매매업 → 폐지, 부동산펀드+특별자산펀드 → 통합

### 나. 대주주 관련 요건 합리화

#### ① 대주주 적격성 심사범위 조정(시행령 개정)

- (현행)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 참여가 불가능한 자도 포함 → 불합리하게 대주주 결격 요인으로 작용
- (개선)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이 공정위에서 확인 되는 경우,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

#### ② 기관제재에 따른 인가제한 규제 완화(감독규정 개정)

- (현행) 금융투자업 대주주 요건상 '최근 3년간'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
- (개선) 기관경고에 한해 동 제한기간을 '최근 1년간'으로 단축

\* 시정명령, 영업정지 등 상위단계 제재는 현행과 같이 '최근 3년간' 제한 유지

## 다. 기타 규제 정비

### ① 인가 행정관행으로 운영중인 '숙려기간' 폐지(숨은규제 개선)

- (현행) 인가절차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6개월간 인가 신청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운영
- (개선) 법령상 근거가 없는 숙려기간을 폐지

### ② 인가·등록단위 자진 폐지후 재진입 제한 완화(감독규정 개정)

- (현행) 금융투자회사가 인가·등록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, 해당 업무단위에 대해 5년간 재진입을 제한
- (개선) 보유중인 인가·등록단위 전체를 자진 폐지·매각하는 경우에만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하고, 사업 구조조정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에는 1년 경과후 재신청 허용

### ③ 업무단위별 진출입이 용이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인가·등록 최저자기 자본 미달시 인가·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단축(1년→6개월, 시행령 개정)

## 2 인가절차 정비

### ① 인가→등록제 전환 예정인 상품 관련 업무단위 추가(add-on)에 대해서는 "Fast-track 인가" 시행

※ 동일업종내 업무단위 추가(add-on)는 등록제로 전환할 예정이나, 관련 법령 개정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⇒ 신속히 인가받을 수 있는 Fast-track 절차를 마련하여 법령 개정전까지 운용

- (현행) 취급 상품이나 영업대상 투자자 추가시에도 금감원 심사→증권위 심의→금융위 예비·본인가 등 중층적 심사를 거침
- (개선) 취급 상품 추가 등 '변경 인가' 신청시에는 등록제에 준하는 신속한 인가절차 운영(인가 소요기간을 7~8개월→3~4개월로 단축)

## ② 인가요건별 심사 가이드라인 공표

- (현행) 구체적인 금융투자업 인가심사 기준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움
- (개선) 인가심사 기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공표

## ③ 인가 신청시 제출 서류 간소화(현행 약 20종 제출 → 최소화)

### 3 인가정책 보완

#### ① 現 인가정책 기조를 유지하되, 업종별로 일부 조정·보완

- (투자매매업·중개업) 유사성이 크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인가 단위를 묶어 “일괄 인가제\*” 시행

\* 신규 인가시, 상호연관성이 높은 인가·등록 업무단위 조합을 일괄적으로 인가  
(예시 : 중개업 영위하려는 경우 → 증권·장외파생 중개업 일괄 인가)

- (집합투자업) 자산운용사의 사업모델과 성장경로를 감안하여 “성장 단계별 인가 기준” 마련·시행

\* 증권펀드 운용사 경로, 실물펀드 운용사 경로, 자문·헤지펀드운용사 경로 등 3가지 경로별 인가 기준 공표

#### ② 겸영금융투자업자, 선물업자에 대한 인가 허용범위를 확대

업권	추가 허용
보험	▶손해보험사의 금전신탁 겸영 허용
선물사	▶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업무 범위를 확대 - (현재) 상품 기초에 한정 → (확대) 통화·이자율·신용 기초 추가 허용

#### ③ 인가정책에 대한 금융투자업자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 (예 : 매년 1/4분기중)으로 ‘인가정책 방향’을 공표

#### ④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인가 신청건은 우선심사 등 인센티브 제공

### ① 유연하고 탄력적인 '금융투자회사 경영 여건' 조성

- 업무단위 폐지후 재진입 제한이 완화(5년→1년 제한)됨에 따라 미영위 업무단위 폐지로 인한 금융투자회사의 부담 경감

- 불필요한 업무단위를 폐지하여 필요유지자기자본 규모를 줄이고, 새로운 NCR 체계('16년 투자매매업·투자중개업 대상, 전면시행)하에서 투자여력 추가 확보, 건전성 관리 등이 가능

\* 新NCR = (영업용순자본 - 총위험액) / 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

- 등록만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단위가 대폭 늘어나면서 업무범위 확대, 업무단위 일부 폐지후 시장 재진입이 보다 용이해짐

⇒ 금융투자회사의 시장 진출입이 원활해지고 탄력적인 경영전략 및 특화전략 수립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

### ② M&A 등을 통한 금융투자업 구조조정 촉진

- 일부 불합리한 대주주 심사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인수·합병,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반 마련

### ③ 불필요한 규제비용 절감

- 인가절차상의 숨은 규제·불필요한 규제를 발굴·개선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온 규제비용을 대폭 경감

### ④ 금융투자업의 전문화·특화 촉진 및 성장기반 마련

- 증권사에 대한 '일괄 인가제', 자산운용사에 대한 '성장경로별 인가 기준 제시'를 통해 전문화·특화社로의 성장 유도

※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

- ☐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(9월중 시행)
- ☐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'14년말까지 법안 국회 제출, 관련 규정 개정 등 추진

※ 별첨 : 「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」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